

“계엄군 국가유공자 취소 입법 서둘러라”

광주서 지정 취소 입법공청회...보훈처·국방부 소극적 대처 지적 “5·18유공자와 함께 국립묘지 안장 안돼...56명 즉각 자격 박탈을”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 투입됐던 계엄군 중 심의조차 없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56명(광주일보 2018년 12월18일자 6면)에 대해 즉시 자격을 박탈할 수 있는 데도, 국가보훈처와 국방부가 소극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심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유공자 권리가 소멸되지만 국방부 등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다.

5·18항쟁은 정부에 의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받고, 국가기념일로 지정되면서 법적·행정적 측면에서는 명예회복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해자인 계엄군이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실질적인 명예회복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일부 극우 세력 등에 의해 5·18 희생자들이 여전히 폭도로 폄하되는 빌미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2일 광주시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국회의원의 주최로 ‘5·18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렸다.

토론자들은 현행법상 5·18 당시 계엄군·경의 국가유공자 취소와 국립묘지 이장이 가능한지 여부,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 여부 등에 대해 논의했다.

민병로 전남대 교수는 “국가유공자 지정은 ‘전투 또는 공무수행 중 사망·상’이 요건이지만, 계엄군의 광주 진압은 전투로 볼 수 없고 공무(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또한 아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1997년 대법 판결 때 국가유공자법 제9조 제3항 2호(국가유공자 등의 요건 관련 사실에 중대한 흠결)에 따라 계엄군의 유공자 지정 취소를 보훈처에 통보했어야 하는 데도, 이를 하지않았다는 게 민 교수의 주장이다.

민 교수는 또 “전두환·노태우의 경우 내란죄에 해당돼 국립묘지 안장 제외 대상이지만 김영삼 정권 말기 때 특별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안장이 가능할 수 있다”며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과 ‘국가

장법’을 개정해 두 전직 대통령의 국립묘지 안장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정호 변호사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법상 계엄군의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는 민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김 변호사는 다만 “법이 2012년 개정됐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렵다”며 “법 개정을 통해 국가유공자 제외 대상이 5·18민주화운동 진압이 원인이 된 경우로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국민을 살해한 군인이 5·18 유공자와 함께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는 현 상황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동희 국가보훈처 과장은 “5·18민주화운동특별법에 진압군을 국가유공자 대상에서 제외하고 취소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국가유공자법과 보훈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아 보인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권리를 박탈하는 부분은 법체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송갑석 의원은 “5·18이 일어난 지 40년이나 된 시점에서 이 토론회를 여는 것 자체가 부끄럽다”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에 대한 당위성을 확인하고 법안 제·개정이 원활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국립묘지에 버젓이 묻힌 계엄군

22일 광주시의회에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려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계엄군의 자격 박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계엄군 23명이 묻힌 국립서울현충원.

22일 광주시의회에서 ‘5·18 계엄군 국가유공자 지정 취소를 위한 입법공청회’가 열려 심사를 거치지 않고 국가유공자로 지정된 계엄군의 자격 박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됐다. 계엄군 23명이 묻힌 국립서울현충원.

울 초등생 예비소집 불참자 중 전남 아동 2명 소재 파악 안돼

울해 전남 공립초등학교 예비소집 불참 아동 가운데 2명이 22일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7일까지 학교별로 진행된 2019학년도 초등학교 신입생 예비소집에서 취학예정자 명단에 올랐으나 나타나지 않은 아동은 461명이었다. 이 가운데 459명은 취학이 유예·면제·연기됐거나 해외출국, 병원 입원, 대안학교 진학 등으로 불참 사유가 확인됐다. 나머지 2명은 이날 현재까지 소재가 불명확하다.

도교육청과 학교는 아동 2명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 소재파악을 의뢰했다. 광주 공립초 예비소집 불참 아동 소재는 지난 18일 모두 확인됐다. 지난 9, 11일 2차례 실시된 공립초 예비소집에는

828명의 아동이 나타나지 않았었다. 광주시교육청은 유선전화, 가정방문, 출입국 사실 확인 등을 통해 불참아동 전원 모두 신변에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한편 올해 광주·전남 초등학교 신입생은 지난해보다 1500명가량 늘어날 전망이다. 광주 공립초 신입생은 지난해 1만 4600명이었으나 올해는 1만5400명, 전남은 지난해 1만5800명에서 올해 1만 6400명으로 600~700명가량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신입생 증가는 출산 붐이 일었던 2012년생 흥풍이 어린 이들이 올해 취학대상이어서 일어난 일시적 현상”으로, 정확한 신입생 규모는 올 3월 초 확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백혈병으로 세상 떠난 아들 그리워하다...

아들 생일날 아버지 숨진채 발견

백혈병으로 세상을 떠난 외아들을 그리워하던 40대 아버지가 아들의 생일날 스스로 세상을 떠났다.

22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9시께 광주서 서구 유덕동 광신대교 주차장에서 전남도청 공무원 A(41)씨가 자신의 쏘렌토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A씨는 이날 주차장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A씨는 지난해 7월 외아들(당시 11세)이 세상을 떠나자 심하게 괴로워하며

우울증에 시달려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A씨는 자신의 형에게 ‘세상을 떠난 아들이 보고싶다. 너무 힘들다’라는 등의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A씨가 평소에도 숨진 아들로 인해 매우 힘들어 했다는 주변인들의 진술과 숨지기 직전에 아들의 납골당을 다녀온 사실을 토대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할 예정이다.

/김현영 기자 young@kwangju.co.kr

헤어지잔 말에...술 마시다 여친 살해 30대 긴급체포

순천경찰은 22일 여자친구를 숨지게 한 A(37)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1일 오후 7시 5분께 순천시 조례동 한 원룸에서 여자친구인 B(40)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2017년 알코올 치료를 받던 B씨를 만나 2년여간 교제해 왔으며, 이날 함께 술을 마시던 B씨가 “헤어지자”고 말하자, 목을 조른 것으로 밝혀졌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장기 구경 잘하다가...혼수 말다툼 끝 70대 노인끼리 주먹질

○...동네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두고 있는 장기를 구경하던 70대 노인들이 혼수 끝에 몸싸움까지 해 경찰서행.

지휘됐었다는 것.

○...당시 K할아버지가 혼수를 두던 Y할아버지에게 “시끄럽다. 혼수 두지 말라”고 말한 게 발단이 돼 싸움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K씨의 눈

○...22일 광주북부경찰에 따르면 Y(79)할아버지와 K(75)할아버지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광주서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두는 장기를 구경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끼리

7(9)할아버지와 K(75)할아버지는 지난 21일 오후 4시께 광주서 북구 우산근린공원에서 다른 사람들이 두는 장기를 구경하던 중 서로 말다툼을 하다 주먹끼리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신일철주금 강제동원 피해자 민변, 추가로 모아 소송키로

민중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일제 강점기 시절 구 일본제철(현 신일철주금)에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을 추가로 모아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대법원의 배상 판결에도 불구하고 신일철주금은 그 어떤 혐의의 의사도 밝히지 않고 있다”며 “이에 아직 소송을 제기하지 못한 피해자들을 대립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소송을 내려 한다”고 밝혔다.

민변은 25일 서울 서초동 민변 대화의실에서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나 유족을 대상으로 소송 설명회를 연다. 이후 오는 3월 8일까지 상담 신청을 받은 뒤 원고인단을 구성해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선관위 ‘불법 후원금’ 조합장 입후보 예정자 고발

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13일 실시하는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불법으로 후원금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광주 모 조합장 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광주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원 등으로 구성된 한 단체에 후원금 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에서는 후보자는 선거인이나 선거인이 설립·운영하는 단체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광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금품·향응제공 등 기부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금품선거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경찰청은 제2회 전국동

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불법 행위 단속에 돌입했다.

경찰은 1단계로 이날부터 오는 2월25일까지는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수집과 단속을 진행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 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는 2단계 단속 체제에 돌입, 각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경찰 조직 내 모든 부서를 활용해 단속활동을 벌인다.

또 설 명절을 전후해 조합원을 상대로 한 금품 살포, 시례 약속 등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고 선거관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적극 단속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40초 만에 보성 금은방 2인조 도둑 6일 만에 검거

보성경찰은 22일 “금은방을 텀 한모(33)씨와 김모(22)씨를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16일 새벽 4시 15분께 보성군 보성을 한 금은방에 침입해 20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한씨 등은 모자와 마스크 쓴 채 출입문 강화유리를 부수고 진열장에 있던 목걸이와 팔찌 등을 40초 만에 훔쳐 달아났다.

경찰은 이들의 동선을 추적해 이날 오후 3시 22분께 충북 청주시 시외버스터미널 인근에서 검거했다. 이들은 이미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팔아 도주 자금으로 사용했으며, 나머지 귀금속은 경찰에 압수됐다.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보성=김용백 기자 kyb@kwangju.co.kr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광주전남 기능장 1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특수가발 별매 (윈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매주화요일 휴무 (일요일 정상 영업)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광주 남구 주월동 1199-12 라인가든아파트 상가 2층(대광여고 옆)
062.673.5858 (모발모발)

노안수술 받으면 돋보기 없이 J1, J2 글자를 읽을 수 있습니다

노안수술 후 읽을 수 있는 글자 크기

신세계안과 문의 1566-9988